

## 사라져야 할 지방대학

전상인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대학은 두 종류다. 하나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며 다른 하나는 지방에 소재한 대학이다. 후자의 경우를 우리는 흔히 지방대학이라 부르는데, 그것은 단순한 지리적 범주가 아니라 우열을 규정하는 차별화 개념이다. 지방대학이라는 표현 속에는 지방에 대한 중앙의 우위를 당연시하고 정당화하려는 서울 중심주의가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이나 포항제철을 지방기업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민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기관의 공식명칭은 어디까지나 서울 지방경찰청이다. 그런데 울산대학교나 포항공과대학은 지방대학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서울시내에 위치한 어떤 대학도 서울 지방대학으로 부르지 않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국민의 정부’가 탄생하여 혁명적인 교육개혁을 모색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대학을 서울과 지방으로 양분하여 인식하는 발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서울의 몇몇 명문대학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공리에 빠져 있다. 이들을 이른바 연구중심·대학원중심 체제로 개편하여 수년 내에 세계적인 대학으로 키우겠다는 웅대한 구상이다. 한편, 서울의 대학가에는 획기적 구조조정을 위한 자체 노력이 재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양쪽의 흐름을 우연의 일치로 보기는 어렵다. 교육부가 어떤 원칙을 세웠다면 전국의 모든 대학들에게 최소한 형식적으로든 기회균등의 원칙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서울 소재 일부 특정 대학들에게 정부 정책을 미리 귀똥함으로써, 그들만이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혜를 사전에 부여하는 절차상의 우를 범하고 있다. 말하자면 ‘사전담합’이나 ‘불공정거래’의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

는 것이다.

물론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의 몇몇 대학을 소위 거점 대학으로 육성하는 사업을 보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니 양지와 음지를 골고루 살피려는 교육부의 배려를 욕할 수도 없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교육부는 '지방' 대학과 '서울' 대학 간의 역할분담 방안까지 제시해 주었다. 전자는 학부과정에서 열심히 고향의 인재를 가르치고, 후자는 대학원을 도맡아 국가적인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발상이 문제의 핵심이다. 왜 지방 대학은 학부이고 서울의 대학은 대학원인가? 왜 '서울' 대학에 대한 지원이 우선이고 '지방' 대학 발전은 그것에 대한 보완 대책이나 후속 조치밖에 되지 않는가?

이와 같은 서울·지방 대학간의 주종적(主從的) 관계 정립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비이상적이기도 하다. 서울에 소재하는 일부 대학들에게 대학원·연구중심 대학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더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 그들은 지난 십수 년간 대학원·연구중심 대학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사실상 독식했지만, 내용적으로는 학부교육에서 기득권만 챙겨왔을 따름이다. 대학원·연구중심 대학이 되기 위한 준비 부족을 말하자면 서울과 지방 간의 차이는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서울' 대학에 한정하여 대학원·연구중심 교육을 위한 여건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벌을 줘야 할 곳에 상을 주는 꼴이다. 정부는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대학원·연구중심 대학 육성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서울' 대학과 '지방' 대학 간의 주종적 역할 분담은 또한 장기적으로 막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사회구조의 중앙집권화와 문화발전은 반비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다. 서열주의와 획일주의 때문이다. 이른바 세계적인 일류대학은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진 곳에 훨씬 더 많다. 교육부가 입만 병긋하면 떠드는 하버드대나 옥스퍼드대는 지방에 존재하는 세계적 명문대학이다. 그리고 그들은 불과 몇 년 동안에 걸친 정부의 집중적 지원으로 발전하지 않았다.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스스로의 힘으로 명문이 된 것이다.

지방대학의 대학원 발전과 연구여건 개선이 도외시되면, 학부교육도 덩달아 부실해진다. 지방대학이 위축되면 지방이 붕괴하고, 지방이 와해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보면 현재의 교육부 정책은 '나라 살리기'가 아니라 '나라 망치기'이다. 지금처럼 쫓기듯, 숨어서 하는 대학혁명은 교육부와 일부 '서울' 대학 간의 '암거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바깥수록 돌아가고 급할수록 원칙이 필요한 법이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에는 지방대학이 사라질 때만, 혹은 모든 대학이 지방대학이 될 때만 미래가 있다. ❧

---

전상인/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브라운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을 거쳐 현재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기획부처장을 맡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1946년경 남한주민의 사회의식", "양반과 부르조아", "국립 서울대의 정치사회학" 등을 발표하였다.